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상법상 상인 또는 상인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출판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의제상인이다.
- ㄴ. 미성년자에게 제조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것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당연상인이다.
- ㄷ.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의제상인이다.
- ㄹ. 자연인인 상인이 영업 중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2.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배인은 영업주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주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②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표현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 ② 영업을 폐지하면서 등기된 상호를 양도하는 경우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 ④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상업 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법 제37조의 규정은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⑤ 등기신청인이 제대로 신청하였음에도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등기된 때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상법상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상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은 고려하지 않음)

- ① 금융리스업자 ② 육상운송인 ③ 가맹상
- ④ 공중접객업자 ⑤ 위탁매매인

5. 상법상 「민법」에 대한 상행위의 특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채무는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 ③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 ④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⑤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6.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 ㄴ. 익명조합원의 출자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기타의 재산에 한정되고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ㄷ. 영업자가 영업재산 또는 그 영업의 이익을 임의로 유용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ㄹ.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ㅁ. 익명조합원의 사망은 익명조합 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7. 상법상 대리상 또는 위탁매매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 ③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되는 때의 매매 대가는 위탁자가 위탁매매인으로부터 매매의 통지를 수령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 ④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 ⑤ 대리상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대리상계약은 종료된다.

8. 상법상 가맹업, 금융리스업 또는 채권매입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가맹상은 가맹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 ⑤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9.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본적 상행위가 아닌 그 밖의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은 회사가 될 수 없다.
- ② 합병회사는 다른 합병회사의 사원이 될 수 있다.
- ③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회사의 해산판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 ⑤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주식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10. 상법상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것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유한회사에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ㄴ.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
- ㄷ.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ㄹ.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써 회사대표자로 지정되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질 수 있다.
- ㅁ. 합병회사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11.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의 과반수로 이를 정한다.
- ② 정관은 발기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면 성립한다.
- ④ 정관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⑤ 회사가 성립되었으나 인수된 주식의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12.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주식의 일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발행된 액면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가의 총액으로 한다.
- ⑤ 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3.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적법한 주권의 불소지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 ④ 주권이 발행된 경우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없다.
- ⑤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14.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회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ㄴ.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할 수 없다.
- ㄷ.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ㄹ.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그 주식의 취득 대가로 현금 외에 다른 종류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ㅁ.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15.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② 회사는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허락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고, 회사는 정관에 폐쇄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폐쇄기간 개시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 ⑤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16.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가 승인하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③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발행전에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④ 회사성립후 6월 경과 전에 주권발행전의 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그 양도의 하자가 치유된다.
- ⑤ 회사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7. 다음 중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 **안**된 것은?

- ① 액면주식의 분할 ② 사후설립 ③ 법정준비금의 감소
- ④ 회사의 계속 ⑤ 감사의 해임

18.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영업전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청구권은 그 행사로 회사와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③ 주식매수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 ④ 매수가액에 관하여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와 주주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반대하는 주주로부터 회사가 매수한 주식의 처분에 대해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9.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회사는 그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④ 연 2회의 결산기를 정하고 있는 회사는 각 결산기마다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의 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0. 상법상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 ②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하기 전에 만료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재임중은 물론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회사는 임기 중에 있는 이사를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 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1.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이사인 주주가 부당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소주주로 하여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결의취소의 소에 대한 취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22. 상법상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의 구성원이 아니다.
- ② 대규모 재산의 차입은 이사의 결의로 한다.
- ③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이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3.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 선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관에 이사선임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음)

- ① 회사가 발기설립의 방식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를 선임한다.
- ② 회사가 모집설립의 방식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로 이사를 선임한다.
- ③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를 선임한다.
- ④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이사 후보자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24. 상법상 주주제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제안권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다.
- ② 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가진다.
- ③ 주주제안권을 가진 자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과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 ⑤ 적법하게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5.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법정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주주는 신주의 주주가 된다.
- ②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경우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한다.
- ③ 신주 발행을 수반하지 않아도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④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줄어드는 법정준비금과 늘어나는 자본금이 같은 금액일 필요는 없다.
- ⑤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회사의 순자산이 회사 밖으로 유출된다.

26.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감사를 여러 명 선임한 경우 이들은 회의체를 구성하므로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감사 후보자의 승낙을 얻어 그 후보자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지면 대표이사와의 임용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 후보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 ③ 자회사의 감사는 모회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④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⑤ 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27.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게 정한 경우 상법상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이사회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② 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 ③ 신주인수권증서의 소지인이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 ④ 신주인수권증서를 점유하는 소지인은 신주인수권증서가 아닌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증서의 소지인이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을 상실한다.

28.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설립등기사항이다.
- ② 회사는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집행임원에게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사외이사가 재직중인 회사의 집행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 ⑤ 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9.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정관 규정을 둔 회사의 경우 주식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배당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 ③ 주식배당을 통해 자본금이 증가하면, 그 금액만큼 회사의 법정 준비금이 감소한다.
- ④ 주식배당이 완료된 후에도 변경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 ⑤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30.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적분할임을 가정함)

- ① 분할합병의 상법상 절차를 종료한 분할승계회사의 이사회는 공고로써 분할승계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분할합병 관련 사항의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분할회사의 주주는 분할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여진 분할을 할 날에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 ③ 분할합병에서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지 않고 그 대가의 전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
- ④ 분할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분할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⑤ 분할합병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 후에 취득한 재산은 분할승계회사의 단독 소유로 한다.

31.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B회사의 주주들에게 A회사의 자기주식과 금전으로만 합병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상법상 합병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회사와 B회사는 비상장회사이며, 간이·소규모합병은 고려하지 않음)

- ① A회사 및 B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 ② 합병을 할 날
- ③ A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④ A회사 및 B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 ⑤ A회사의 증가할 자본금에 관한 사항

32. 상법상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회사와 B회사는 비상장회사이며, 간이·소규모 주식교환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해 B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지만 A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가 완료되면 B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A회사 주식은 A회사에게 이전된다.
- ③ A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B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대가로 B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는 없다.
- ④ B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교환계약서를 승인한 후 B회사 주주에게 주권을 제출할 것을 통지한 경우 B회사 주주가 주권을 제출하면 그 시점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
- ⑤ 주식교환무효의 소에서 주식교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A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A회사로부터 신주를 발행받았거나 A회사의 자기주식을 이전받은 B회사의 주주에게 B회사 주식을 이전해야 한다.

33. 환어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②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 ③ 배서인이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경우, 그 배서인은 자기 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발행인이 기재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소지인은 지급거절과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잃으나, 그 기재한 문구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인수에 대한 담보의무만을 면할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어음에 배서한 내용 중 '담보하기 위하여'의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소지인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 있다.

34. 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 배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환어음에는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을 적어야 한다.
- ② 환어음의 만기를 변경하여 인수하였을 경우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인수인은 그 인수 문구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환어음의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하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
- ④ 수표의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 ⑤ 수표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5. 환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도 있다.
- ② 환어음은 지급지 내에 있으면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던 다른 지(地)에 있던 관계없이 제3자방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③ 수표의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하며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④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⑤ 환어음의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나, 수표의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6. 환어음의 상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발행인, 배서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어음의 소지인은 거절증서 작성일 이후의 4거래일 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무비용상환 또는 거절증서 불필요의 문구를 환어음에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인수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 ④ 발행인이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경우, 소지인은 법정기간 내 환어음의 지급제시 및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다.
- ⑤ 발행인이 거절증서 불필요 문구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켰으면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한다.

37. 수표법상 수표의 보증 또는 지급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보증의 표시는 수표 또는 보충지에 하여야 하나, 지급보증의 표시는 수표의 앞면에 하여야 한다.
- ② 수표의 지급보증인은 수표의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지급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
- ③ 수표의 앞면에 발행인 및 지급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④ 보증인이 수표의 지급을 하면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수표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 ⑤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발행인이나 그 밖의 수표상의 채무자는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8. 수표법상 수표에 인정되는 제도가 아닌 것은?

- ① 자기지시수표 ② 위탁수표 ③ 등본
- ④ 복본 ⑤ 제3자방 지급 기재 수표

39. 다음 사례에서 어음의 원인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는 2023년 1월 5일 B로부터 외상으로 부자재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 5백만원을 2023년 2월 6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동시에 A는 X가 발행한 약속어음(만기: 2023년 2월 6일, 어음금액: 5백만원)을 위 매매대금 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B에게 배서·교부하였다. A와 B간에 어음 수수의 구체적인 목적에 관하여 명시적 합의는 없었다.

- ① A는 매매대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을 B에게 배서·교부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2023년 2월 6일에 B는 X에 대한 어음채권과 A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어느 것을 먼저 행사하더라도 무방하다.
- ③ 만일 2023년 2월 5일 부자재 매입계약이 취소된다면 A와 B사이의 어음관계는 소멸한다.
- ④ 2023년 2월 6일 B가 X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X로부터 어음금 5백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A의 B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도 소멸한다.
- ⑤ 2023년 2월 6일 B가 X에게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을 당한 경우, B가 A에게 그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A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40. 환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에는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
- ② 환어음의 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 ③ 환어음의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책임을 면한다.
- ④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 ⑤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제시은행이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수표법상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할 경우,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세법개론

6.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 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ㄷ.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ㄹ.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 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ㄱ, ㄷ, ㄹ

7.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2023.12.31.) 자료이다. (주)A의 제23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 (1) (주)A는 금융회사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 (2)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0,000원이다.
- (3) 매출액 300,000원과 매출원가 220,000원이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누락되어 있다.
- (4)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급비용 해당액 2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5) (주)A는 B은행에 대한 차입금 200,000원을 출자전환하면서 주식 10주(액면가 5,000원, 시가 3,000원)를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차입금 200,000원	(대) 자본금 50,000원
	채무면제이익 150,000원
	(영업외수익)
- (6) (주)A는 자기주식처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금 30,000원	(대) 자기주식 2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원
	(자본잉여금)

- ① 140,000원 ② 150,000원 ③ 175,000원
- ④ 290,000원 ⑤ 325,000원

8.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3기(2023.1.1.~2023.12.31.) 접대비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금액으로 옳은 것은?

- (1)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5,000,000,000원이고, 이 금액에는 매출할인 3,000,000,000원이 차감되어 있다.
- (2) 포괄손익계산서상 접대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70,000,000원이고, 문화접대비와 경조금 해당액은 없다.
- (3) 제23기 접대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건당 3만원 이하분	건당 3만원 초과분
적격증명서류 수취분	15,000,000원	53,000,000원
영수증 수취분	1,500,000원	500,000원

- (4) 포괄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 중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한 접대비 해당 금액은 5,000,000원이고, 이 금액에는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5)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률

100억원 이하	3/1,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수입금액-100억원)×2/1,000

- ① 1,500,000원 ② 20,000,000원 ③ 21,500,000원
- ④ 23,000,000원 ⑤ 24,500,000원

9.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아님)의 제23기(2023.1.1.~2023.12.31.) 감가상각 자료이다. (주)A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과 관련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 (1)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00,000,000원이며, 제22기 기초 감가상각누계액은 60,000,000원이고, 제22기 기초 상각부인누계액은 5,000,000원이다.
- (2) 제22기 포괄손익계산서상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2,500,000원이고, 세무상 상각범위액은 13,500,000원이다.
- (3) 제23기 포괄손익계산서상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5,000,000원이다.
- (4) 제23기 포괄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한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액은 1,000,000원이고,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 수선을 위한 지출은 아니다.
- (5) (주)A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 (6) 기계장치에 대한 정액법 상각률은 0.125이고, 정률법 상각률은 0.300이다.

- ① 1,800,000원 ② 2,500,000원 ③ 5,250,000원
- ④ 5,550,000원 ⑤ 6,750,000원

10.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에 포함한다.
- ②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해당 자산가액을 산정한다.
- ③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특별기부금이다.
-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일반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1.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2023.12.31.) 자료이다. 영리내국법인 (주)B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주)A에게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주)A는 (주)B의 주식 5,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보유하고 있고 취득명세는 다음과 같다.

취득일	주식수	비고
2019.5.10.	2,000주	1주당 9,500원에 유상취득
2020.7.20.	2,500주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해 취득
2021.3.20.	500주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해 취득

(2) (주)B는 2023년 2월 20일에 모든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20%를 1주당 2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소각하였다.

- ① 11,500,000원 ② 13,500,000원 ③ 14,500,000원
- ④ 15,500,000원 ⑤ 16,500,000원

12. 「법인세법」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신고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시설개체 또는 기술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④ 유가증권 중 채권의 평가는 개별법, 총평균법 및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 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13.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대상 아님)의 제23기(2023.1.1.~2023.12.31.)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A의 제23기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1) 제23기 재고자산 내역

구분	장부가액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원재료	150,000원	250,000원	200,000원	150,000원
재공품	350,000원	370,000원	360,000원	350,000원
제품	250,000원	230,000원	200,000원	270,000원

(2) (주)A는 제22기까지 원재료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여 평가하여 왔으나, 제23기부터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제23기 10월 20일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신고를 하였다.

(3) (주)A는 제22기까지 재공품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여 평가하여 왔으나, 제23기에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재공품을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였다.

(4) (주)A는 제품을 신고한 평가방법인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으나, 계산착오로 인하여 50,000원을 과대계상하였다.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①	50,000원 (유보)	-
②	70,000원 (유보)	-
③	70,000원 (유보)	50,000원 (△유보)
④	120,000원 (유보)	-
⑤	120,000원 (유보)	50,000원 (△유보)

14.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2023.12.31.) 자료이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세무조정이 제23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의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1) (주)A가 특수관계인들에게 2022년 5월 6일에 대여한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대여기간: 3년)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자수익은 전액 장부에 계상하였다.

구분	연이자율	대여금	이자수익
갑	-	30,000,000원	-
을	8%	40,000,000원	3,200,000원

(2) (주)A의 당기말 현재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차입금은 모두 은행(특수관계인 아님)으로부터 2022년 3월 7일에 차입하였다.

구분	연이자율	차입금	지급이자
기업구매자금대출*	8%	600,000,000원	48,000,000원
운영자금대출	10%	900,000,000원	90,000,000원

*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른 것임

(3) 당좌대출이자율은 12%이며 (주)A는 「법인세법」상 금전대차거래의 시가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① (+) 3,240,000원 ② (+) 9,680,000원 ③ (+) 9,760,000원
- ④ (+)10,240,000원 ⑤ (+)13,440,000원

세법개론

15.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2023.12.31.) 자료이다.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제23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 당기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운용자산		(단위: 원)	
기초잔액	87,000,000	당기감소	10,000,000
당기증가	20,000,000	기말잔액	97,000,000

(2)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계정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기초잔액의 세무상 부인액은 20,000,000원이다.

퇴직급여충당금		(단위: 원)	
당기감소	40,000,000	기초잔액	50,000,000
기말잔액	10,000,000	당기증가	0

(3) 당기중 종업원 갑과 을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각 지급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구 분	퇴직급여지급액	비 고
갑	30,000,000원	(주)A가 현금으로 지급
을	10,000,000원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

(4) (주)A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하고 있으며, 세무상 기초잔액은 40,000,000원(△유보)이다.

(5) 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은 일시퇴직기준 90,000,000원이고, 보험수리적기준 95,000,000원이다.

- ① (-)55,000,000원 ② (-)65,000,000원 ③ (-)75,000,000원
 ④ (-)95,000,000원 ⑤ (-)97,000,000원

16. 「법인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급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과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
-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 내국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으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내국법인A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계열회사는 내국법인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내국법인B에 과반수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C에 40%를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나 개인은 내국법인B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은 포함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2023.12.31.) 자료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1) (주)A의 사업용자산 화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화재 전 장부가액	재해상실가액	화재 후 장부가액
공장건물	400,000,000원	100,000,000원	300,000,000원
차량운반구	100,000,000원	40,000,000원	60,000,000원

(2) 사업용자산은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금으로 8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주)A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소유 자산 100,000,000원이 공장건물 화재로 전액 상실되었다. (주)A는 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부담한다.

(4) (주)A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이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2023년 10월 2일에 경정을 받았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과다납부 세액은 40,000,000원이다.

(5) 당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법인세액은 없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도 없다.

산출세액	공제·감면 세액	가산세액	차감납부할세액
300,000,000원	30,000,000원*	6,000,000원**	50,000,000원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임
 ** 원천징수등 납부지연 가산세임

- ① 40,000,000원 ② 110,400,000원 ③ 118,400,000원
 ④ 150,400,000원 ⑤ 280,000,000원

19.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 ②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 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 거주자 갑(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음)의 2023년 금융소득 관련 자료이다.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 (1) 출자공동사업자로서 현금배당 6,000,000원을 받았다.
- (2) 비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하여 무상주(10,000,000원)를 받았다.
- (3) 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 7,000,000원을 받았다.
- (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현금배당 8,000,000원을 받았다.
- (5) 직장공제회로부터 초과반환금 1,000,000원을 받았다.
- (6) 법원보증금 이자 2,000,000원을 받았다.

- ① 0원 ② 25,000,000원 ③ 25,550,000원
- ④ 31,110,000원 ⑤ 31,550,000원

2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의사가 제공한 의료보건의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다.
- ②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모집수당 등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 ③ 조립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④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징수하되, 공제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2. ㈜A(중소기업 아님)의 영업부서 종업원인 거주자 갑의 2023년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갑의 2023년 근로소득 총급여액으로 옳은 것은?

- (1) 급여: 21,600,000원(월 1,800,000원×12개월)
- (2)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 10,000,000원
(잉여금처분결의일: 2022.11.25., 지급일: 2023.1.25.)
- (3) 식사대: 3,000,000원(식사대 이외에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음)
- (4)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2,000,000원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임)
- (5)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400,000원
- (6) 휴일근로로 지급받은 초과근로수당: 2,000,000원
- (7) 학자금: 8,000,000원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자녀의 대학등록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임)

- ① 32,000,000원 ② 35,000,000원 ③ 37,000,000원
- ④ 45,000,000원 ⑤ 46,000,000원

23.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 ②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지축계좌에서 퇴직연금계좌로 일부가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본다.
- ③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4. 거주자 갑의 2023년 토지(미등기 아님) 양도 관련 자료이다. 양도소득 금액으로 옳은 것은?

- (1) 갑은 2023년 9월 8일 토지를 800,000,000원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였다.
- (2) 갑은 해당 토지를 2017년 6월 5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 (3) 갑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40,000,000원, 양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5,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사실은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4) 토지 취득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는 600,000,000원이고 취득시 기준시가는 420,000,000원이다.
- (5)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2%이며, 토지의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개산공제율은 3%이다.

- ① 200,112,000원 ② 211,200,000원 ③ 227,400,000원
- ④ 294,800,000원 ⑤ 323,312,000원

세법개론

25. 거주자 갑의 2023년 종합소득공제 관련 자료이다. 갑의 인적공제액과 특별소득공제액의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및 부양가족 현황

구분	나이	비고
본인(남성)	50세	총급여액 30,000,000원
배우자	48세	은행예금이자 2,000,000원
모친	78세	전통주 제조소득 6,000,000원
아들	20세	소득없음
딸	10세	소득없음

(2) 모친의 전통주 제조소득은 「주세법」에 따른 전통주를 농어촌 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3) 딸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장애인이다.
 (4)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갑이 납부한 보험료는 2,500,000원이다.
 (5) 무주택 세대주인 갑은 법령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5,000,000원을 상환하였다.
 (6) 갑은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였다.

- ① 12,500,000원 ② 14,000,000원 ③ 15,000,000원
- ④ 16,500,000원 ⑤ 18,000,000원

26.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진출이 이루어졌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② 거주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⑤ 임원인 근로소득자가 계속근로기간 중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27.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업부진으로 장기간 휴업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③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④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⑤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거주자 갑의 2023년 소득내역이다. 갑의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구분	금액	실제 필요경비
지역권(공익사업과 관련 없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	3,000,000원	2,000,000원
복권당첨금품	3,001,000원	1,000원
상속받은 저작권 양도로 받은 대가	10,000,000원	8,000,000원
전국요리경연대회 상금*	4,000,000원	-
퇴직한 전 회사에서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3,000,000원	-
일시적인 외부특강료	2,000,000원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임

- ① 3,600,000원 ② 4,000,000원 ③ 5,200,000원
- ④ 5,400,000원 ⑤ 6,200,000원

29. 거주자 갑의 2023년 종합소득 관련 자료이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후 갑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은 주거용 건물임대업이 아니다.

(1) 종합소득금액 내역(△는 결손금을 의미함)

구분	2022년	2023년
이자소득금액	5,000,000원	25,000,000원
배당소득금액	3,000,000원	16,500,000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10,000,000원	15,000,000원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소득금액	△30,000,000원	△35,000,000원
근로소득금액	15,000,000원	5,000,000원
연금소득금액	6,000,000원	6,000,000원
기타소득금액	4,000,000원	-

- (2) 2021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없다.
- (3)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제한 없이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 ① 0원 ② 17,500,000원 ③ 27,500,000원
- ④ 29,000,000원 ⑤ 32,500,000원

30.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후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④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지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 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법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해야 한다.

3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②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따라 수출재화를 임가공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③ 외국을 항행하는 원양어선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④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그 목적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으로 무상 반출하는 경우에 한함)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⑤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은 대가수령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3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ㄴ.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 및 광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ㄷ.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ㄹ.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ㅁ.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된 것에 대해서는 관세가 경감되는 비율만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ㄹ
-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

33. 일반과세자 (주)A의 2023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2023.7.1.~2023.9.30.)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내역이다. 2023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일자	내역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7.10.	원재료 구입	110,000,000원*	11,000,000원
7.12.	거래처 접대용 물품 구입	10,000,000원	1,000,000원
7.15.	생산직 직원들의 작업복 구입	20,000,000원	2,000,000원
8.10.	건물 구입**	500,000,000원	50,000,000원
	건물 철거비용**	30,000,000원	3,000,000원

* 실제 공급가액은 100,000,000원이나 착오로 110,000,000원으로 기재됨
 **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 후 토지만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가치세 구분표시) 수취내역

일자	내역	공급대가
9.10.	직원 추석선물(과세재화) 구입*	2,200,000원

* 2023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함

- ① 12,000,000원 ② 12,200,000원 ③ 63,000,000원
- ④ 63,200,000원 ⑤ 65,200,000원

34.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거주자 갑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차감 전)으로 옳은 것은?

(1) 2023년 제1기 공급 및 대손 자료

- ① 2023년 제1기 공급가액은 600,000,000원이며, 이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임
- ② 거래처에 대여한 3,300,000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2023년 2월 1일 회수불능으로 판명됨
- ③ 2022년 제1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외상매출금 중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2023년 6월 20일 회수됨

(2) 2023년 제1기 매입 자료

- ① 과세재화: 200,000,000원(공급가액)
- ② 국산 면세농산물: 54,000,000원

(3) 기타 자료

- ① 2023년 제1기 예정고지세액: 10,000,000원
- ②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108이며, 공제대상액은 한도 내 금액임
- ③ 2022년 제1기 공급가액은 500,000,000원이고, 2022년 제2기 공급가액은 700,000,000원임
- ④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발급하였으며,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함

- ① 20,370,000원 ② 20,670,000원 ③ 22,270,000원
- ④ 26,090,000원 ⑤ 26,390,000원

세법개론

35.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인 10월 25일 발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다음달 25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탁판매에 있어서 위탁판매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③ 공급대가 20만원인 거래에 대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 ④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⑤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36.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 갑은 건물을 신축(공사기간: 2023.4.1.~2023.11.30.)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신축건물의 매입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 건물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2023년 제1기 10,000,000원이고, 2023년 제2기 20,000,000원이다.

(2) 사업별 공급가액 및 사용면적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공급가액		사용면적	
	과세	면세	과세	면세
2023년 제1기(예정비율)	40%	60%	50%	50%
2023년 제2기(실제비율)	45%	55%	53%	47%

(3) 2023년 제1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 ① 8,500,000원 ② 9,500,000원 ③ 10,900,000원
- ④ 13,500,000원 ⑤ 15,900,000원

37. 거주자 갑은 2023년 7월 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재고매입세액으로 옳은 것은?

(1) 2023년 7월 1일 현재 보유자산 현황

구 분	취득일	취득가액(공급대가)	시 가
상품	2023. 6. 1.	1,100,000원	2,000,000원
기계장치	2023. 1. 1.	확인안됨	55,000,000원
화물자동차	2022. 9. 1.	22,000,000원	11,000,000원
건물	2021. 3. 1.	110,000,000원	88,000,000원

(2) 업종별 부가가치율: 20%

- ① 5,694,500원 ② 6,709,500원 ③ 7,039,500원
- ④ 8,057,000원 ⑤ 16,894,500원

38. 거주자 갑의 증여 관련 자료이다. 증여재산가액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2023년 7월 1일 거주자인 아들에게 지정지역 외에 소재한 토지X를 증여하였다.

(2) 토지X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150,000,000원이고, 2023년 5월 1일 유사한 토지Y의 매매가액은 250,000,000원이며, 2023년 8월 1일 토지X의 감정가액은 200,000,000원이다.

(3) 증여일 현재 토지X에는 금융기관 차입금 18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234,000,000원이 설정되어 있다.

- ① 180,000,000원 ② 200,000,000원 ③ 225,000,000원
- ④ 234,000,000원 ⑤ 250,000,000원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이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② 손해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 ④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족보와 제구에 대하여는 재산가액 합계액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0.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이다.
-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